

월요광장

통일의 여정에서 바라본 북한인권침해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행하게도 남북한은 UN 회원국 중에서 유일한 민족분단국가이다. 남북한은 반세기 이상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군사적 대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악화일로로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어둠이 깊으면 동이 튼다’는 평범한 이치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 해가 떠오르 듯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필요한 모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처럼 민족분단국가였던 독일은 국내의 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 민족통일을 이루어 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동독체제가 남긴 불법적인 유산들을 유혈폭력이 아닌 사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청산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동서독 주민이 통합된 가운데 EU의 중심국가로 유럽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

을 향한 최선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UN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조사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UN총회도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6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고, 지난 30년간 여기에서 약 4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필품과 의약품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는 대부분 체제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의 인권침해는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결국 외부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체제 스스로 불법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조사하

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일은 문명사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경고하고, 제지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 가치로 지향하는 인류공동체의 의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UN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어떠한 형태의 북한인권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독은 1961년 동독이 베를린장벽을 구축하자 곧바로 잘츠기터라는 국경마을에 중앙 법무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동독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자행된 모든 정권범죄에 관한 증거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기관의 존재가 알려지자 동독 정권수뇌부는 물론 국경수비대의 말단 병사도 통일 후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체제수호를 위한 범죄행위를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독은 이 기관을 동서독 교류협력의 장애편로 규정하고 즉시 폐지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지만 서독은 보복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통일시까지 존속시켰다. 그 결과, 이 기관이 꾸준히 수집해온 각종 자료들은 후일 동독정권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진실에 기초한 화해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 동포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대한 처벌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서 독일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와 같은 감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행보를 규정한 code book로 지향하는 새 정부는 훗날 통일조국의 일원이 될 북한주민들의 행복에 대하여도 원칙이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의미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도 북한 주민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만 높여주는 또 다른 퍼주기로 끝나게 될 것이다.

법조칼럼

세상 속 변호사



정우중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예쁘고 멋진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현란한 변론기술을 선보이면서 각종 법률개념 및 법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한 사람이라면 실제 법정의 모습에 의아해 하기 쉽다. 필자도 법정에서의 변론을 실제 경험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드라마 속 변호사를 꿈꾸었다. 그리고 아직 경험은 일천한 변호사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다. 법률분쟁은 본래 사람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은 사람간의 이해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맡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나 법률개념이 아니라 의뢰인과 소통이다. 실제 법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재판부나 검사, 상대 변호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법원 선배로부터 “법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부모라면 당연히 의뢰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법정에서 의뢰인 편에 있어 줘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말의 의미가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 크게 다가온다. 지난해 대비되는 2가지 사건을 경험했다. 첫 번째는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한 뒤 혼수 문제 및 성역 차이고 수억 원의 예물을 돌려달라는 사건이었는데, 필자 스스로 당사자 간 문제를 납득하기 어려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리하게 조사를 받고, 증거도 불리한 것밖에 없었던

피의자였는데, 의뢰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서로 교감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건이었다. 모든 사건이 변호사의 생각과 같은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그만큼 변호사가 의뢰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또 법률가는 많이 알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법조문의 문구나 법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들은 법률용어나 법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경제, 공학, 농업, 산업, 건축, 금융, 의학 등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천재만상의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재천 교수는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silience’를 번역하면서 통섭(統攝), 즉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 핵심 논리는 “우물물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한다”는 말로 간단히 설명된다. 즉 법률분쟁에 대비시켜 보면 사안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상황을 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통섭의 필요성을 느낀다. 일례로 몇 년 전 수입자동차 딜러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의 심리과정에서는 정지한 법리보다는, 수많은 통계학적 분석자료와 자동차의 성능이라는 공학적 지식 및 재화의 대체 소비가능성이라는 경제학적 분석이 핵심이 됐다. 따라서 법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게 다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단순한 법의 적용이나 법리 및 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결론을 내야한다. 그리하여 법률가는 사람들 위에 서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1명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변호사가 필자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적지임을 되새겨본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실사, 모두가 감동 보여줘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현지 실사가 오늘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코넬 마르쿠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을 비롯해 시설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29일 오후 광주 공항에 도착해 광주시가 마련한 프리젠테이션과 동아시아수영대회를 참관한 뒤 강운태 시장이 개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30일 오전에는 경영, 수구 등 주경기장이 들어설 남부대학의 현장을 둘러보고, 공식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산업체를 방문한 뒤 서울로 이동해 이흥구 전 국무총리 초청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실사단은 5월1일 정총원 총리를 접견한 뒤 출국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위해 울산에서 개최가 예정된 동아시아수영대회를 광주로 끌어왔고, 정부와 체육계, 재계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다. 이미 광주

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준비 중이어서 세계수영대회 유치가 성사된다면 대회 운영의 노하우나 광주시민의 자력에 비추어 성공 개최를 담보할 수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잘 알려진 대로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3대 메가 스포츠로 그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광주가 유치가 성공할 경우 세계 10억 명의 이목을 집중시켜 국제도시로서 위상은 물론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원, 취업 유발효과 1만 8000여 명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광주 실사는 개최지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준비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과 질서 지키기 등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감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정부도 확고한 광주 지지 의사 표명과 함께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는 곧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떠들더니 ‘쥐꼬리’ 인하인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인 ‘반값 등록금’이 헛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 등록금은 지난해 정거점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됐지만 올해 대학 신입생의 등록금 인하는 ‘쥐꼬리’에 그치고 말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은 평균 3만1000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인하율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평균 0.46%밖에 안 되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 등록금도 2년 연속 내리기는 했지만 올해는 0.08%에 그쳐 시늉만 냈을 뿐이다. 지난해 4.5%와 비교하면 사실상 인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750만 원을 넘었으며, 조선대·동신대·전남대·순천대·목포대 등 이 지역 주요 10개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571만 원으로 부담은 여전한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대학 등록금은

시민 가계를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이다. 더욱이 지방의 학부모들이 수도권이나 지역 사립대에 자녀를 진학시킨 후 졸업까지 겪는 학비 마련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등록금을 버느라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공부에서 뒤지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5688억 원을 증액한 1조 688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인하하기로 했지만 도움이 된다는 수혜자들은 많지 않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과 함께 대학의 과감한 인식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대학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발전기금만 쌓아 놓을 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기금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최대 인상률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등 반값 등록금에 근접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無等鼓

새해가 다가올 즈음이면 찡기는 게 있다. 새로운 달력, 지인들 선물용으로 몇 개, 집에 걸어둘 것 한 개.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 동안은 항상 똑같은 걸 구입했다. 목판화가 이철수의 달력이었다. 그를 이르는 말 중 대표적인 게 ‘관화로 시를 쓴다’는 평이다. 딱 들어맞는 말이다. 부박한 목판화로 찍어낸 그의 작품은 단출해서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기를 담고 있다. 달력을 밖에 걸어두고, 오며 가며 한번씩 바라볼 때면 복잡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듯했다. 매달 ‘그림 한점씩’ 선물 받는 셈이라며 지인들도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잠시 잊었던 이철수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이들 뒤따라 올텐데’를 통해 ‘그림 한점씩’ 선물 받는 셈이라며 지인들도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목판화가 이철수



수 없이 남용돼 본 뜻을 잃어가는 ‘윌링’이 지겨워질 지경인 요즘이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을 한번쯤 돌아보게하는, 진짜 위안이 담긴 그의 부박한 목판화를 만나보자. 놓치면 후회할 것이다. 초대전은 5월5일 어린이날까지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배꽃 엔딩’



고재형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4월의 일요일이다. 지금쯤 서울 옛집 마당 너머 수북이 피어오르는 배꽃이 그리워진다. 굳이 이조년 선생(先生)을 말하지 않더라도, ‘梨花에 月白하고 鐵漢이 三頭인제...’. 어쩔지 애잔하고 수줍은 듯 가녀린 꽃이 파리가 흔들린다. 배꽃은 아무리 활짝 피어도 화려하진 않게 보인다. 아마 배가 가진 천성(天性)이 그러하나 보다. 그렇다만, 인견비어 그렇다 해도 노동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만은 우리의 4·19와도 닮지는 않았는지? 성공하여 완전한 시민혁명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까지는 됐지만 민주주의 역사의 마무리가 아쉬운 오늘 그 허전함은 배꽃 잊혀질 작은 바람결에도 휘날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유리 4·19혁명 묘지를 참배했다고 언론매체에서는 여러 가지 행간의 숨은 뜻을 말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걸 말하려 하진 않았다. 4·19를 한 달 지나면 5·18이다. 5·18행사에 지난 5년간 이 나라 국가원수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4·19와 5·18 모두 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아닌가. 이번 33주년 5·18 기념식에서는 박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해본다. 광주시민으로써, 아니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반드시 참석하여 5·18의 의미가 또 다른 정책적 목적으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요즘은 내러즌 사이에 지역을 가르는 망발이 무성하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지역적 편견을 넘어, 원색적으로 우리 지역을 비난하는 누리꾼이 양산되는 것 같다. 전라도를 흉어라는 지금 한 비난으로 상계를 벗어나고 있다. 나주의 특산물인 배가 지금은 울산의 명물이 된지 오래다. 대구의 사과가 장성, 곡성에서 더 유명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나주하면 배가 특산이고, 대구하면 사과가 특산이다. 마치 두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물이다. 그럼 배의 성질 또한 어떠한가? 배는 그 생김새가 누르스름하지만 껍이보면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일종의 파도(果刀)라는 절차를 마치면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그야말로 하얗게 필이다. 그럼 사과는 어떠한가? 빨갛게 익은 사과는 굳이 파도 같은 절차가 없어도 썩썩썩 문질러서 껍질째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속살은 설렁하게 정말 뽀얗다. 이런 게 두 지역의 특색일지도 모른다. 지난 설 선물으로 두 과일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 ‘紅東白西’라는 선물 세트가 인기였다고 한다.

선물 이름이나 기획의도가 재치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민주사회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5·18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은 처리할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채다. 5·18은 역사적 사실이고, 법률적 단죄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피해자 또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또 봄날은 간다.. 한해의 농사는 이 봄날에 결정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걷이 없다. 박 대통령의 국민화합을 위한 씨 뿌리는 모습이 진정보고 싶은 이유다. 지난 5년간 5·18을 대하는 정권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을 것이다. 전라도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배꽃이 피었다 지는 이 4월에 이제는 엔딩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갈고 그 꽃 같은 손수가 4월과 5월 하늘에 가득하면서 말이다.

24시간 맞교대 아파트 경비 근로환경 개선해야

아파트 경비원들이 얼마전 경비원 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황당만 시위와 청원을 정부에 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 이유는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울리던 아파트에서 아예 경비원들을 잘라 버리기 때문에 처리리 지금의 급여만 버틸라도 그냥 근무하는 게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그렇다 해도 노동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아버님은 18시간씩 근무도 하신다. 당연히 즐기고 피곤하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지만 아예 들어가서 대놓고 누울 수 있는 처지도 못되니 근무지 책상에 엎드려 졸음을 청하거나 의자에 앉아 고개를 찌르고 피곤함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라고 하신다. 1500가구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버님은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한다. 휴식 시간이 따로 없어 주된 왕래가 적은 시간

에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 게 전부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는 이처럼 대부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감시직, 단속직 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이런 종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없다. 경비원들이 요일이나 명절 구분없이 1년 내내 24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원

의 노동 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다. 아파트 경비 업무를 24시간 하다 보면 그게 곧 중노동이다. 순찰이나 차량 단속은 물론이고 고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던지거나 무단으로 가구를 버리면 그 뒤처리도 경비 몫이다. 자전차가 없어져도, 주차된 차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은 경비에게 달려가 책임을 물으니 24시간 긴장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이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찾아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미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